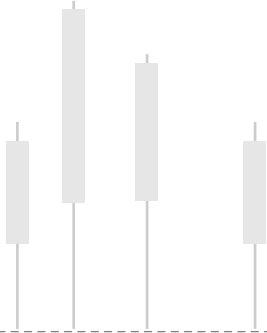


한국경제의 미래와 비전



박상원 / 본지 발행인
경제학박사/CBS 객원해설위원

20년 전인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의 플라자 호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선진 5개국의 재무장관들이 모였다. 이들은 미국의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우여곡절 끝에 일본 엔화의 가치를 높여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키워 주기로 합의했다. 이 '플라자 합의'는 그 후 세계 경제 질서의 뼈대가 됐다.

20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미국의 무역수지는 여전히 적자 상태다. 원유 수급 불안도 국제적 협의로 풀어야 할 과제다. '제2의 플라자 합의'로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회의 참가 후보국으로 한국은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이 허탈감...

전문가의 견해를 종합해 보니 기존 선진7개국(G7) 모임과 중국 러

시아 인도 브라질 등 4개국을 포함한 'G11' 회의가 예상된다. 한국은 세계 10, 11위 경제 대국이라 우쭐하고 있지만 미래의 세계 경제를 논하는 자리에 '왕따' 당하는 셈이다.

"한국이 내부 갈등과 과거 문제 집착으로 국력을 소모하는 바람에 경쟁국들이 추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강대국에 대해 "할 말은 하고 따질 것은 따지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호언(豪言)도 국력이 뒷받침돼야 먹혀들지 않겠는가.

골드만삭스, 도이체방크 등 외국 기관이 내놓은 '2020년 신경경제질서' 자료를 보면 한국의 미래 경제력은 불투명하다. 15년 뒤 한국은 브라질 러시아 캐나다 멕시코 네덜란드 등과 함께 10~15위 자리를 다툰 전망이란다.

미래학 분야를 천착한 하인호박

사는 최근 펴낸 '한국인의 선택적 미래 2020'이란 자서에서 남북한 통일이 원만하게 이뤄지고 경제, 사회 시스템과 과학 기술 수준이 선진화되면 2030년엔 한국이 이탈리아 스페인 등과 8~10위를 겨룰 것이라고 예측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거대한 돌발 사건을 일컫는 '와일드 카드'가 한반도 안팎에서 생길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나락(奈落)으로 빠질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와일드 카드로는 동북아 전쟁, 자연 대재앙, 갑작스러운 미군 철수, 중국 경제의 호황과 위기, 제조업 공동화 등이 꼽혔다.

이러한 미래의 한국에 대한 전망을 살펴볼 때 미래는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경제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

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작금의 한국경제를 진단하는 좋은 논문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명지대학교수이고 시장경제제도 연구소장인 조동근 교수의 논문 “『나쁜 경제』이유 있었다” (현정 2005년 8월호)

논문 “『나쁜 경제』이유 있었다”

경제의 성과는 결과로서 말한다. 참여정부 출범 이래의 3.1%, 4.6%의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7% 공약에 비춰 볼 때 초라한 성적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경제에 모든 것을 다 걸겠다던 올해의 예전성장률도 4%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어찌 보면 4% 안팎의 성장률에 대해 경제위기로 규정할 필요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아직은 ‘청년경제’로서 자전거 페달을 더 힘차게 밟아야 하기 때문에 저성장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경제 환경은 그리 우호적이지 못하다. 대내적으로 우리 사회는 곧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그리고 본 궤도에 오른 중국과 힘겨운 경쟁을 벌여야 하며, BRICS의 부상도 우리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모든 현상에는 본질이 있다. 따라서 최근의 저성장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를 불식하지 못하면 우리경제는 ‘저성장의 구조화’를 피할 수 없다. 결국 ‘M’자형의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국내총생산은 경제활동의 총화이기 때문에, 저성장의 원인은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은 “대외여

건, 국민의 경제의식, 경제제도의 정합성과 효율성, 요소투입량”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 요소투입량(또는 자본재 활용률)은 국민의 경제의식, 미래에 대한 전망, 각종 경제제도의 정합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은 소프트웨어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의 저성장 원인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다음의 3가지 비유에서 찾자 한다. 참여정부 들어 우리사회에는, “운이 좋은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인식이 부지불식간에 만연되어 있다. 부(富)에 대한 질시와 냉소가 짙게 깔려 있다. 시장경제에서 부와 소득은 남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정직한 땀을 흘려야 하고 커즈너(Kirzner)의 ‘깨어있는 경각심’으로 무장해야 한다. 운이 좋은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인식은 정직한 노력을 통한 부의 창출을 희화화하고 있는 것이다. 남이 잡은 벌레를 같이 나누려는 사회가 건강할 수 없다.

“고래를 연못에서 기를 수는 없다”

글로벌 경쟁시대의 경제적 강국은 고래를 몇 마리나 넓은 바다로 보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 8년간 우리나라의 글로벌 500대 기업의 수는 정체되어 있다. 그 이유의 일단은, 정부가 관치의 타성에 젖은 나머지 ‘규제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전 세계적으로 11개에 지나지 않는 “순이익 100억불 클럽”에 진입했다. 기

업경쟁력은 정형화할 수 없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규제당국의 눈에 삼성전자는 그저 규제를 받아야 할 기업으로 비쳐지고 있다. 고래를 방류하지 않으면 고래는 연못에서 죽게 된다. 관치가 타성화된 사회, 규제의 끈을 놓지 않는 사회, 정부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회, 시장의 힘을 신뢰하지 않는 사회가 건강할 리 없는 것은 당연하다.

“악어꼬리와 독수리 날개 그리고 코끼리 다리는 결합시킬 수 없다” 설령 결합시킨다 하더라도 이는 작동가능하지 않다. 참여정부는 그간 결코 결합될 수 없는 이념과 모델들을 “대 타협과 사회적 합의”란 명분 하에 결합하려고 시도했다. 예컨대 주주중심주의와 노사공동결정제 그리고 비정규직 노사대타협은 양립될 수 없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정사회협약도 양립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는 결국 정책의 불확실성만을 증폭시킬뿐이다. 대 타협은 일견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해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타협에서 보다 큰 몫을 가져오려면 ‘이쪽의 힘’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사전적 기대와 달리 대타협은 적과 나를 구분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참여정부 들어 균형발전과 형평성제고가 화두로 등장했다. 분명 ‘평등’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평등주의’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포퓰리즘과 결합된 평등

주의는 하향평준화를 가져오며 궁극적으로 부를 파괴시킨다. 중국적으로는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물적 토대마저 붕괴된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잇기 마련이다. 최근 들어 왜 우리경제의 날개가 꺾였는지를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저성장은 구조화된다. 이를 뒤집어 보면, 그 이유를 성찰하고 그것을 제거하면 우리경제는 다시 금 재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IMF 외환위기 도래로 우리 경제는 미증유의 거친 파고를 맞이해야 했다. 일반 대중의 분노와 좌절을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으며, '재벌의 IMF위기 책임론'이 제기되었다. IMF 외환위기는 '판치경제 시스템의 실패'에 기인하기 때문에, 기업, 정부, 금융기관, 투자자 누구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따라서 재벌책임론은 일종의 '마녀사냥'이다. 재벌책임론은 재벌에 대한 반(反)국민정서를 증폭시켰으며, 유구무언(有口無言)일 수밖에 없는 재벌은 정부의 재단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기업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쟁력제고이다. 따라서 경영성과의 개선을 수반하지 않는 구조조정은 의미가 없다. 재무구조관련지표는 뚜렷이 개선되었으나 수익성 관련 지표(총자산경상이익률 기준)의 개선은 별로 이루어지지 못했

다. 구조조정이 기술혁신이나 기업 경영 효율의 증진보다는 인력감축과 재무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계속기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이자보상배율 200%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의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다. 이처럼 김대중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드라이브는 기업의 효율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지 못했다. '무늬'만 개선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은 재벌의 합리적 경제계산과 기대형성을 통한 '자율적 개혁의지'를 저하시키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

김대중 정부의 'IMF조기졸업' 선언은 구조조정의 손을 놓는 패착(敗着)으로 연결됐다. 2000년 4/4분기부터 성장이 둔화되자 정책기조를 경기부양으로 급선회했다.

저금리 기조와 신용카드 보급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김대중 정부 5년차인 2002년의 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일조했지만 많은 부작용을 잉태하였다. 참여정부 출범 직전 신용불량자수는 3백만명을 넘어섰다. 신용불량자 3백만명은 경제활동인구 7명중 1명꼴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는 숫자이다. 신용불량자의 급격한 증가는 당연히 신용카드사의 수익성을 악화시켰다.

2001년 2.6조원, 2002년 상반기 중 1.1조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던 카드사는 2002년 하반기에 1.4

조원의 당기순손실로 전환됐다. 신용카드사 발행채권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저금리기조는 금융권의 수신을 '단기 부동화' 시켰다.

4%대 초반의 명목금리는 물가상승과 세금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되어, 자금이 부동화(만기 6개월미만의 금융권 수신)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금융화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의 '예비 신호'이다. 더욱이 행정수도이전 공약은 부동산기대심리를 조장하기에 충분했다.

참여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이 노정(노정0되는 시점에 출범했기 때문에 '경제의 초기조건'은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다. 도처에 지뢰가 깔렸지만 위험요인을 예의주시하지 않았다. 대신 국가균형발전과 동북아 금융허브(물류중심)의 청사진이 그 자리를 메웠다. 한마디로 현실인식이 너무 안이었다. 명분을 쌓고(균형발전) 비전을 제시하면(동북아중심경제) 경제는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것"으로 여긴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은 IMF외환위기 같이 걸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평온한 위기' 상황이었다. 참여정부는 안이한 현실인식으로 위기를 위기로 보지 못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활성화를 꾀해 부동산자금을 산업자금으로 흡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그러면 지금 좁 사정이 달라졌을 것이다.

성장과 분배간의 선순환은 사전적 기대

참여정부는 분배우선의 정책기조를 선택했다. 사회통합과 형평제고를 위해 분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분배우선의 논리적 근거로 “성장과 분배간 선순환”을 제시했다. 분배개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득분배의 초기조건이 ‘극단적’으로 불균등하지 않는 한, 분배개선이 성장을 촉진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득분배 개선이 성장을 촉진한다는 인과관계는 실증적 근거가 결여(缺如)된 ‘기대’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IMF외환위기를 계기로 계층별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저성장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해서는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참여정부의 분배우선의 정책기조는 ‘성장과 분배의 논쟁’을 유발했다. 그러나 소득분배를 정태적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소득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으면 계층간 소득분배는 ‘제로섬게임’이지만 소득의 크기는 변한다. 따라서 정책적 관심은 최하위 계층의 생활소득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점차 개선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소득분배의 문제가 아닌 ‘사회안전망 구축’ 내지 ‘빈곤의 문제’인 것이다.

행정수도 건설로 동반 저성장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이다. ‘행정중심도시 건설’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인위적 분산은 단기적으로 지역간 격차를 물리적으로 해소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물리적인 지역격차 해소가 지속적인 지역간 동반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 ‘동반저성장’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서울과 수도권의 인위적 분산정책은, ‘부자의 셈’에서 ‘빈자의 셈’으로 물을 퍼 나르는 정부의 모습에 비유될 수 있다. 양동이(정책도구)로 물을 나르는 과정에서 물은 새겨 되어 있다. 따라서 ‘부자의 셈’은 마르고 ‘빈자의 셈’도 채워지지 않을 수 있다.

지역간 경제력의 격차는 마땅히 축소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왜 격차가 벌어졌는지를 냉정하게 성찰해야 한다. 그러나 여론동향은 속성상 냉철할 수 없다. 원인규명이전에 지역격차 그 자체에 관심이 쏠려있다.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지방경제가 고사한다는 것이다. 1991년부터 2001년까지 광역자치단체별 실질지역내총생산의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고소득지역의 GRDP 성장률이 저소득지역의 GRDP 성장률 보다 높음으로써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벌어졌다. 그러나 분석기간을 IMF위기 이후로 좁히면(1997~2001) 지역간 경제력의 차

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지역경제 성장률이, 둔화될수록 지역간 경제력의 차이가 더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인당 지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할 때 이 같은 경향은 더욱 강화된다.

솔로우(Solow) 류(類)의 ‘성장수렴가설’은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노력은 타당하다.

그러나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발상이 전환되어야 한다. “저소득지역이 저소득지역으로 남아 있는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를 찾아 이를 해소할 때, 동반성장을 가능케 하는 길이 열린다.

고소득지역을 규제하기 보다는 저소득지역의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자립기반 마련이 지역정책의 골간이 되어야 한다. 서울의 강남과 강북도 마찬가지다. 강남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강북을 개발해야 한다.

출범 당시 참여정부의 재벌 구조개혁에 대한 기본 인식은 부정적이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같은 인식이 재벌의 경쟁력과 효율성에 기초한 것이 있다면 타당하다. 그러나 부정적 인식은 ‘재벌의 형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재벌의 형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재벌의 변칙과 반칙론’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상대방이 변화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개혁이다. 참여정부는 재벌의 변칙과 반칙이 교정되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가 구축될 수 있

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여야 맞다. 개혁을 통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정부와 시장의 관계가 정상화돼 시장규율이 작동되면, 변칙과 반칙을 일삼는 기업은 경쟁과정을 통해 도태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참여정부 재벌정책의 대표브랜드인 '시장개혁 로드맵'은 인과관계가 도치된 것이다.

기업은 시장으로부터 상시적인 평가를 받는다. 소비자가 외면하는 기업, 투자자가 외면하는 기업은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없고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결국 퇴출된다. 기업의 옥석(玉石)이 제대로 가려질 때 국민경제의 경쟁력이 제고된다. 그리고 간간한 소비자와 간간한 투자자가 많아야 기업의 옥석이 가려진다. IT기술의 발달로 정보 확산이 빨라지면서 소비자는 간간해지고 있다. 그러나 간간한 투자자 보육은 그리 여의치 못하다. 간접적으로 투자자를 보육할 수 있을 뿐이다. 우선 투자자가 올바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업정보의 신뢰성을 높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배주주가 사익추구를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예컨대 소수주권 신장)를 정비해 투자자의 자금제공 유인(誘引)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책소임은 시장규율이 작동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인프라 구축이 아니 재벌규제에 정책의 중심을

두었다. 재벌규제의 핵심은 '출자규제(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속'이다. 한마디로 재벌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출자는 민간기업의 자율적 판단영역이기 때문에, 출자규제는 사(私)영역에 대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 역시 민간기업이 스스로 선택할 사안이므로, 정부가 문어발 여부를 판단할 이유는 없다. 사업포트폴리오 선택과 관련한 현장지식은 정부보다 민간기업이 더 밝기 마련이다.

결국 출자규제를 통해 '투명, 독립경영, 공정경제체제'를 확립하겠다는 시장개혁 로드맵은 부지불식간에 '설계주의와 이상주의'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개혁만능주의는 재벌의 '자율적 변신'에 대한 운신의 폭을 줄이고 경제활력을 저하시키는 치명적 부작용을 빚게 된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로드맵이 아니고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 그 자체인 것이다.

매출액 기준의 포천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1997년~2003년간 한국의 500대 기업수는 13개에 정체되어 있으며, 2004년에는 중국에 추월당했다. 한국의 500대 기업의 1사당 자산총액은 500대 기업을 4개사 이상 배출한 15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업당 평균 종업원수도 15개국 중 2만 5천명으로 가장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은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미몽(迷夢)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이 국민경제를 견인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을 배증(倍增)시키지 않고서는 경제의 규모(2만불 소득)를 키울 수 없다.

노동자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노동자의 '사회적 약자론'은 재벌의 '변칙·반칙론'과 쌍을 이룬다. 재벌은 규제하고 노동자에게 힘을 실어주어 '힘의 중심'이 노동계 쪽으로 좀 더 옮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사회적 약자론은, 힘을 결집할수록 더욱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참여정부 들어 노동운동이 과격해진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기업은 마르지 않는 샘이 아니다. 글로벌 경쟁하에서 노동비용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몫이 커지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몫은 작아지게 되어 있다. 조직될 수 있는 노동자는 조직될 수 없는 노동자와 노동시장에의 진입을 기다리는 취업희망자의 희생 위에서, 고용안정성과 고복지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는 노동자가 아닌 공적부조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의미한다.

따라서 약자 보호는 기본적으로 사회정책의 영역이다. 노사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론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노동자 약자론하에서 노자자율협상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좌우를 아우르는 '제3의 길'은 가능한가? 제3의 길이 실용노선인가? 하이에크(Hayek)는 제3의 길을 최악의 변종으로 혹평한다. 기든스(Giddens) 역시 제3의 길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실용노선은 명분에 치우친 형식논리와 이상주의의 함정을 경계하는 것이지 결코 제3의 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참여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시장중심주의로 표명하고 있다. 영미식 자본주의에 기초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 결합될 수 없는 것을 결합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사회적 협약과 대타협이 바로 그것이다.

주주중심주의와 노사공동결정제 그리고 비정규직 노사대타협은 서로 논리적으로 공존할 수 없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사정협약도 양립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집단주의적 사회협약을 중시하게 되면 자율적 노사관계가 타율적 노정관계로 변질되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물론 타협은 기업차원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나 개별 기업의 범위를 넘는 사회적 대타협은 경제논리로서 가능할 수 없다. 유인을 쫓는 경제행위가 시장을 통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타협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대타협과 사회협약의 강조는 평등주의와 포퓰리즘에 근거한 경제운영의 '정치화'를 조장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협약을 강조하면, 부지불식간에 일반 대중은 기업을 '재산권적 시각'이 아닌 '사회기구적 시각'에서 기업을 보게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왜곡이 빚어짐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 모든 것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공기업 민영화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민영화 중단은 참여정부 출범 초기 이른바 '재검토론'에 의해 예견되었다. 재검토론의 논거는 "여건 조성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공개혁"으로 요약된다. 이때 사회적 합의는 실질적으로 노조의 동의를 의미한다. 이처럼 민영화 의제는 경제논리가 아닌 사회적 합의라는 정치논리에 의해 이끌려 표류하게 된다.

기간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여타 산업의 경쟁력의 기반을 이루고 효율재고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이들 기업을 정부지배하에 두고 효율을 개선시키기는 어렵다.

또한 '자연독점'으로 여겨졌던 산업부문도 최근 기술 발전에 힘입어 지역별로 생산단계별로 경쟁체제 도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기간산업의 '공기업 성역론'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산업의 구조와 특

성상 민간이 할 수 있으면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순리이다. 과다한 공기업체제 유지는 민간부문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민간투자를 밀어내 경제효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공기업은 그 존재 이유에 충실해야 한다. 공기업은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민영화는 공기업과 정치권력간에 '방화벽'을 쌓은 것이다. 최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 문제를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풀 수는 없다. 낙하산 인사는 착지(着地)하는 과정에서 '숨은 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노조를 비롯한 기존 조직은 정통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와의 거래에 능하다.

낙하산 인사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노조와 담합하는 경우 고임금, 고복지로 경영은 방만해질 수밖에 없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또한 외압에 밀려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보여주기 식의 형식적 구조조정에 그칠 개연성이 높다.

위의 인용한 논문을 보고 독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랄뿐이다.

이렇게 경제를 심각하게 보는 경제학자들이 90%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경제가 잘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펴나가는 것을 볼 때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가지게 된다.